KIPEC 현안 보고서

미국 선거구 재획정 동향과 주요 시사점

KIPEC 현안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요약] 2025년 미국에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에서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mid-decade redistricting)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10년 주기 재획정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 현상으로, 하원 다수당을 둘러싼 치열한 당파 경쟁 속에서 양당이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획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향후 미 연방 하원 선거의 경쟁력 약화, 제도적 불균형 심화, 정치 양극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대표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 의회의 권력 구도가 재편될 경우 국방·통상·기술 등 한미 주요 협력 현안에도 의미 있는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 서론

2025 년 11 월 5 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을 통과시켰다.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 년·2028 년·2030 년 연방 하원 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새롭게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mid-decade redistricting)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10 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며, 2020 년 인구조사 기준 연방 하원 435 석은 약 76 만 명당 1 석 비율로 각 주에 배분된다. 각 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10 년 주기로 선거구 지도를 조정한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정당의 의회 의석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치 전략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 과정이 더욱 정치화되면서 선거구 재획정이 사실상 정치 투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의 주가 10 년 중반에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약 10 여 개 주에 선거구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화당의 잠재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하원 의원수는 공화당 219 석, 민주당 213 석으로 극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수의 선거구 조정만으로도 다수당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2026 년 중간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 내부에서도 선거구 재획정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윤리적 이유를 들어 재획정에 반대하는 반면, 백악관 및 보수 세력은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슈퍼팩(Super PAC)인 Club for Growth Action 은 노스캐롤라이나·인디애나·미주리 등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의회에 재획정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캔자스의 경우 백악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수 공화당 의원이 특별회기 소집에 반대하여 지도부가 위원회 직책을 박탈하는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민주당 역시 대응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론이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의원과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은 2025 년 선거구 재획정 개혁법(Redistricting Reform Act of 2025)을 발의해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을 금지하고 독립 선거구위원회 도입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의원 50 명 이상이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 표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quorum) 충족을 막기 위해 주의회를 이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 이 조치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호응을 얻었으나, 중도층과 일부 현지 언론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비평가들은 잦은 선거구 변경이 집권 정당이 마음대로 선거구를 재편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2026 년 미 중간선거 판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치 제도가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 부담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미국 국내정치 이슈가 아니라 미 의회 내 권력 재편, 정책 우선순위 변화, 한국 관련 현안에 대한 의회 관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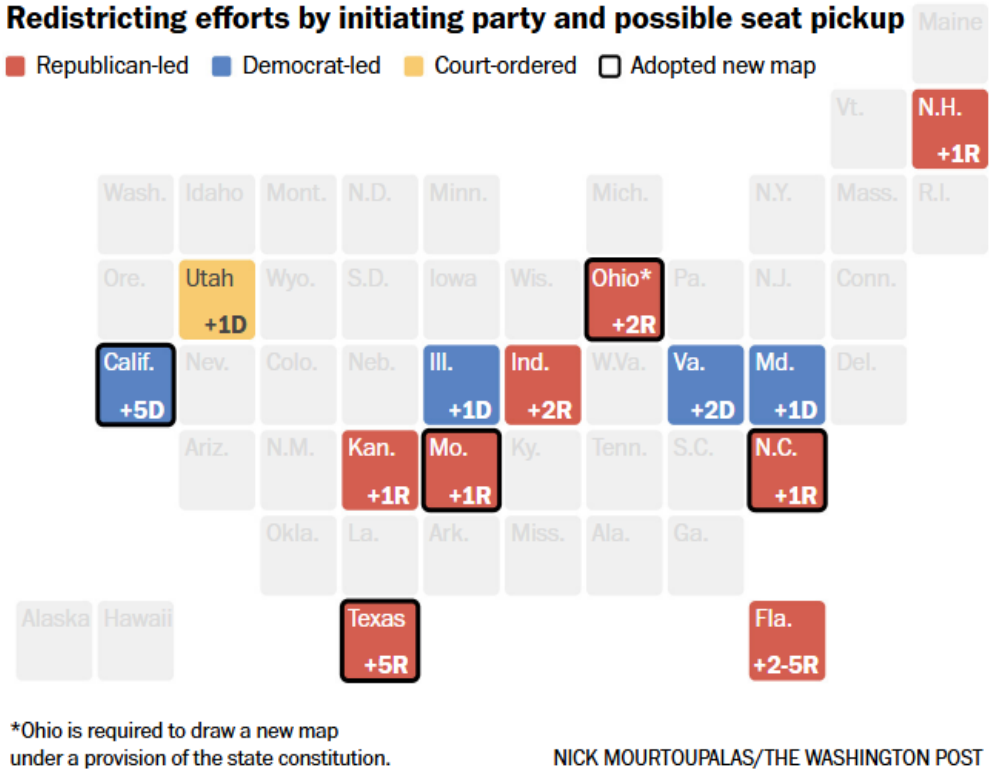
2. 배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과 제도적 허점 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양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등은 공화당 의석 확대를

[1] 텍사스주 하원은 전체 의원 150 명 중 3 분의 2 이상(100 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주 하원에서 62 석을 차지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민주당 우세주들 역시 공화당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재획정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주 헌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획정이 시행되는 주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 확산 현상은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주별 중간 시기 선거구 재조정 현황 및 예상 의석 변화



출처 : Nick Mourtoupalas, *Washington Post* (2025.10.31).
참고 : 2015 년 개헌으로 인해 오하이오 주에서는 초당적 승인 없이 통과된 지도는 4 년만 유효하여 2025 년 자동 재획정이 발생. 금번 재획정은 공화당에 +2 석 증가 전망.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이번 선거구 재획정 논쟁의 촉발점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주정부에 선거구획 재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 하원 의석을 방어·확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하원 의석이 공화당 219 석, 민주당 213 석으로 극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소수의 선거구 조정만으로도 다수당 구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텍사스는 이미 공화당이 최대 5 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채택했고, 미주리·인디애나·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 재획정 전략은 이러한 불리한 관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둘째, 민주당 우세주들 역시 공화당의 전략에 맞서 선거구 재획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최대 5 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메릴랜드·뉴욕·버지니아·일리노이 등에서도 공화당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 방안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타주 당파적 선거구 조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기적 선거구 조정을 허용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허점이 비정기적 선거구 재획정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연방법은 10 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중 추가 재획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2019 년 연방대법원 판례(Rucho v. Common Cause)에 따라 당파적 게리맨더링이 연방법원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각 주의회가 선택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선거구 재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22 년에는 진보 성향이 다수였던 주 대법원이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지도를 위헌적 게리맨더링으로 판단해 법원이 작성한 시정 지도(remedial map)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으나, 2023 년 선거 이후 보수 성향이 다수가 되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고 당파적 선거구 조정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주의회는 법원이 만든 시정 지도를 폐기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중간 시기에 다시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오하이오 역시 제도적 특성이 비정기적 재획정을 촉진하고 있다. 2015 년 개헌을 통해 지도 통과 요건에 초당적 합의가 추가되었으며, **초당적 합의 없이 통과된 지도는 4 년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었다. 그 결과, 2021 년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된 선거구 지도가 자동으로 2025 년에 재획정을 의무화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선거구 재획정을 유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독립 선거구 획정위원회(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에 대한 반발로 그 권한을 약화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2010 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수 주의회를 장악하자, 민주당 우세 지역들은 당파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초당적 위원회를 도입했다. 그 결과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제도적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었던 반면, 민주당 우세주들은 다양한 법적·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전략적 대응이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화거나, 다시 입법부가 선거구 재획정 권한을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안 50 의 통과로 2026 년부터 주의회가 직접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전망

연방 하원 선거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스콘신,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올해 예정된 주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이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선거구 재획정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인디애나·미주리·오하이오·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정당 주도의 새로운 선거구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주별로 상이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의 선거구 공정성 확보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재획정 방안들이 모두 적용될 경우 공화당은 전국 득표율 기준 약 2~3%포인트의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2026 년 중간선거의 경쟁 구도를 한층 강화시키고 경합 지역의 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 시도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21 년 발의된 투표권 증진법(Freedom to Vote Act)은 극단적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칙을 마련하려 했으나, 상원에서의 당파적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10 개 이상의 주가 독립적 또는 초당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입법부가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헌법 개정안 및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정당 중심의 파편화된 시스템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시사점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선거구 재획정 논쟁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 절차를 넘어, 미국 정치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주 입법부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별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가 크게 상이해지는 동시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등 일부 주법원이 당파적 게리맨더링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반면,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주별로 매우 불균형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미국 전체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게리맨더링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총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현직 의원들이 일반 유권자보다 당내 예비선거(primary)의 강경 지지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초당적 협력 유인이 약화되고 이념적 분열이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2026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전체 435개 선거구 중 90개 미만만이 경합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다수 선거구가 사실상 승패가 고착된 '안전지대(safe seats)'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 폭을 제한하고 의회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 간 선거구 경쟁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치제도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이러한 법적·정치적 갈등은 국외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특히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 연방의회의 구성 변화는 한·미 관계의 핵심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 선거구 조정은 공화·민주 양당의 의석 분포를 바꾸며, 이는 미국의 국방, 통상, 기술, 이민 등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분야는 한국의 안보·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둘째, 선거구 재획정은 미국 내 한인 및 아시아 커뮤니티의 정치적 대표성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있다. 한인·아시아계 유권자 밀집 지역이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분리되거나 다른 지역과 통합될 경우,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중간 시기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과 공화당 중진 켄 캘버트(Ken Calvert) 의원이 동일한 선거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관련 입법을 지지해 온 우호적인 의원들의 재선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역구 기반이 약화될 경우 해당 의원들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선거구 변화에 따라 아시아계 유권자 비중이 높은 신규 선거구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 의회 내 권력 구도와 한국 관련 현안의 지속성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파적 선거구 재편의 흐름을 파악할 경우, 우호적 의원 그룹의 변화 가능성이나 의회 내 안정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선거구 재획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향후 대미 의회 외교와 정책 협력 방향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